

12-01

통권 9호

한경-HRI 2012년 1월 3일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제9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6
3. 기획 조사 결과	22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30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지속, 공공요금 인상 등 체감 물가 상승세로 2011년 하반기 경제 행복지수는 37.8로 전기대비 1.6p 하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짐
 -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이 모두 하락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도 소폭 하락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12년 상반기 125.6로 4.2p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질 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전문직,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지역별 : 지역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1년 상반기 39.5에서 하반기에는 37.8로 1.6p 하락한 가운데 서울이 45.4로 가장 높았음
 - 지역 평균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서울,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순임
 -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전북이었고, 서울이 전기대비 6p 상승하면서 크게 높아짐
 - 경제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1인당 GRDP(지역 국민소득)가 높고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곳임
- 직업별 :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타/무직군의 행복지수 하락세가 이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짐
 - 직업별 추이를 보면, 전문직의 경제 행복지수만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와 기타/무직군의 경제적 행복감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문직과 공무원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기타/무직군은 예측 지수도 크게 하락하면서 비관적인 자세를 보임

- 연령별 :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지 못함

-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하락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20~50대에 걸쳐 모두 하락하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음

- 소득 및 자산별 : 소득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지만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행복지수도 크게 하락했음

-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 행복지수는 높으나 소득 수준 연간 6~8천만원 미만과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크게 하락
- 자산별로는 고액자산가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3억원 미만 응답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함

-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는 높지만 전기대비 하락폭도 컸음

-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의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2.4p, 3.0p 하락하였으며,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지수는 고학력자에 비해 하락폭이 작았음
- 고학력자들의 미래 경제 상황 예측지수도 크게 하락하여 악화됨. 한편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예측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이하로 고학력자에 비해서는 비관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

- 혼인상태별 : 미혼자·이혼자·사별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기혼자보다 큰 폭으로 떨어짐

○ 기획조사 결과

- 고용, 수출등 지표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7.2%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소득감소, 가계빚 증가 및 일자리 감소에 기인함
 - 또한, 우리 국민들의 79.5%는 가계의 체감 경기가 2013년 이후에나 개선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이 대부분임
- 한편,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 정책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 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우리 국민들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성장 우선(53.3%)을 복지 강화(46.7%)보다 조금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세대·계층·학력 간에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분명함
 -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은 성장을 보다 중시한 반면 직장인은 복지를 더 중시
 -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3.2%, 60.8%가 성장을 중요시 했지만, 20~30대는 각각 63.1%, 54.1%가 복지를 우선시
 - 소득·자산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1억원 미만의 저액자산가는 복지 강화를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응답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 보다 복지 강화를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
-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내년 3~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이를 위한 동반성장, 기업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 복지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일자리 복지, 영유아 보육, 대학등록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 한편, 이들 중 복지 강화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에는 56.4%가 찬성하며, 현재 소득에서 5% 이내의 추가 부담에 85.3%가 찬성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최근 2%대로 낮아진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직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함

- 둘째, 국민 대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체감 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특히,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함

-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
- 한편 2012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

- 넷째, 복지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 20-30대 일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대학등록금, 주택문제, 보육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복지 재원 부담의 의사 표시도 분명한 만큼 복지지출과 부담의 연계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제9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1년 11월 30일 ~ 12월 13일(2주간)
- 조사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06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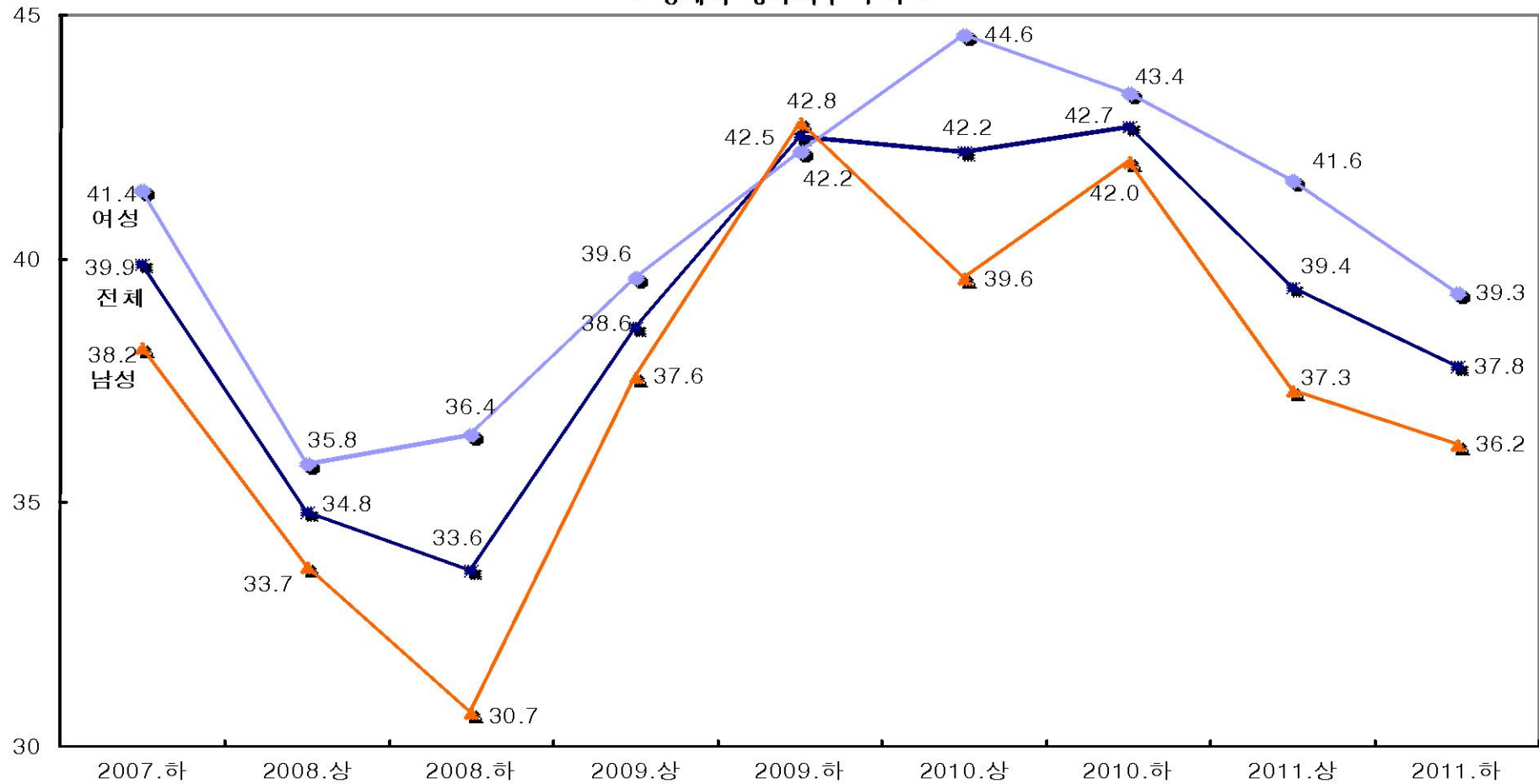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성별
- 지역별
- 직업별
- 연령별
- 소득별, 자산별, 학력별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가 대외 불안정성과 내수 경기 부진 지속 및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7.8로 지난 조사(2011년 6월)보다 1.6p 하락하였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4.2p 하락한 125.6를 기록하면서 2012년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짐
- 2011년 상반기 지난 8회 조사에는 39.4로 글로벌 금융이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1년 하반기 제 9회 조사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짐
- 고용지표 개선,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내내 지속된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대외 불확실성의 가중과 내수 부진 지속, 공공요금 인상 등 체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하락시킨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가 39.3로 전기대비 2.3p 하락하였고 남성은 36.2로 1.1p 하락하면서 2009년 상반기의 수준으로 떨어짐. 한편, 남녀 간 경제 행복지수의 격차는 지난 8회의 4.3p에서 3.1p로 축소되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8회(2011년 상반기) 17.8p 하락한데 이어 2011년 하반기 9회 조사에서도 전기대비 4.2p 하락하면서 2012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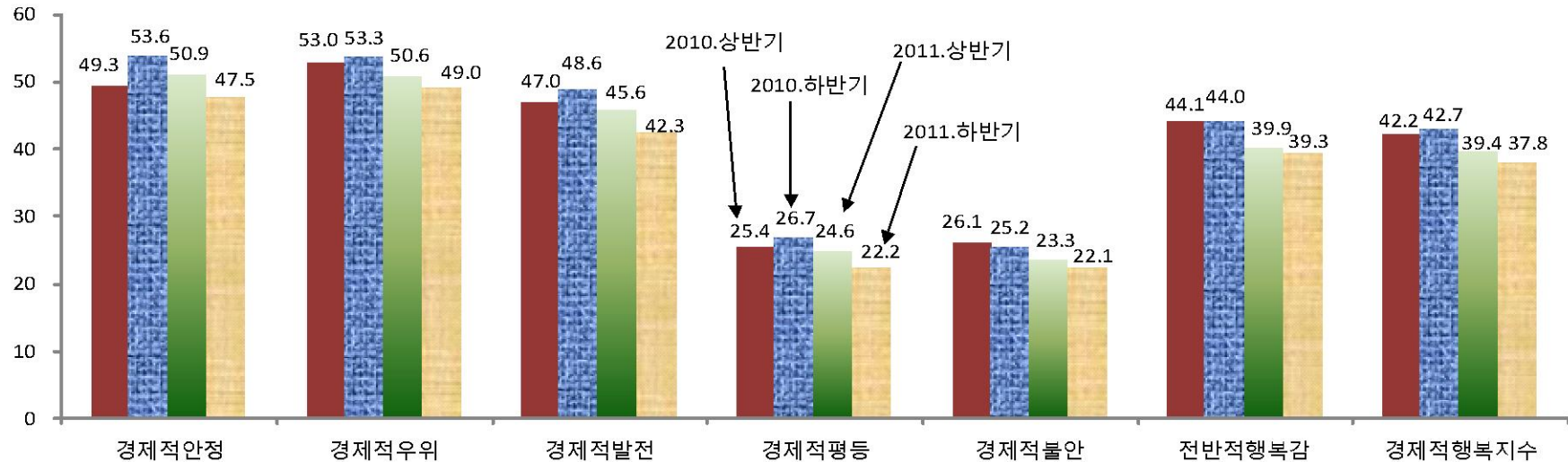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경기 침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 수치들도 모두 전기대비 소폭 하락

- 우선, 경제적 행복지수가 8회 조사 보다 1.6p 하락하여 37.8을 기록함. 각 항목별로는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이 3.4p 하락하였고, 경제적 우위 1.6p 경제적 발전 3.3p, 경제적 평등 2.4p, 경제적 불안도 1.2p 하락하면서 경제적 만족도의 하락에 영향을 줬고 이에 인해 전반적 행복감은 0.6p 하락하였음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2012년 국내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대외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2년 상반기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5.6로 전기대비 4.2p 하락함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전기대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미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 2010년 하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3.3p 하락한 39.4를 기록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도 17.8p 떨어진 129.8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제적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었었음
 - 2011년 하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1.6p 하락한 37.8을 기록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 역시 4.2p 하락한 125.6으로 떨어지면서 2012년에도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하반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재정위기 확대 등 대외 불안요인의 지속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적 행복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침체기 수준으로 낮아짐
 - 아울러, 2012년 상반기에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미래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내외적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추이 >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하반기	2010.상반기	2011.상반기	2011.하반기	2012.상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139.8	142.8	140.6	122.0	114.8
여 성	137.0	131.1	129.2	129.6	148.2	149.6	153.8	137.4	135.8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44.2	146.4	147.6	129.8	125.6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반적 하락세 속에서 서울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5.4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1년 상반기 39.5에서 하반기에는 37.7로 1.8p 하락함

- 지역 평균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서울,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순임
- 경제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전북이었고, 서울이 전기대비 6p 상승하면서 크게 높아짐
- 2011년 하반기 서울과 5대 광역시 중에서 대구, 대전, 인천의 경제 행복지수가 평균대비 높았으나, 부산과 광주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은 전기대비 더 하락하면서 낮게 유지됨

-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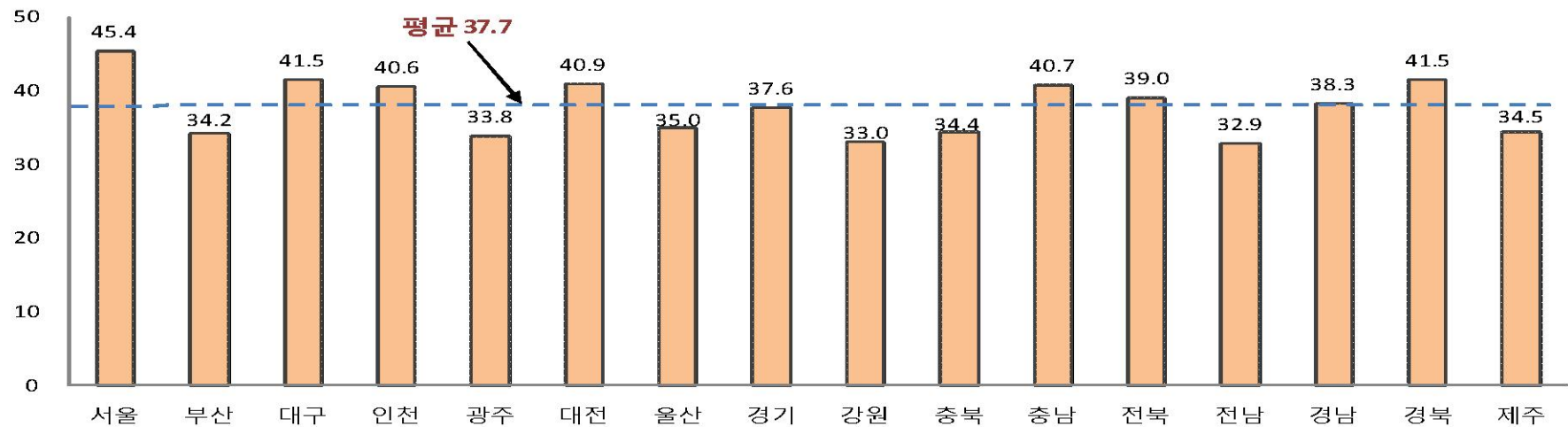
- 경제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1인당 GRDP(지역 국민소득)가 높고 경기가 좋은 지역들임
-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의 경제 행복지수가 41.5로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가 1위였던 서울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높았으나 5대 광역시는 낮아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충남이 144.2로 가장 높았고, 서울 140.8, 강원 142.0, 경남 140.6으로 이들 지역은 2012년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금번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던 광주(33.8), 전남(32.9) 등은 미래 경제적 행복 지수도 각각 103.2, 101.6으로 낮아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54.2	43.1	46.0	49.6	41.7	49.2	50.4	45.6	50.0	45.5	48.4	47.6	40.6	43.8	60.1	42.3
경제적 우위	53.9	45.1	55.2	47.6	44.1	54.0	46.8	47.2	47.2	50.4	50.4	49.6	41.0	47.7	56.0	46.4
경제적 발전	47.9	36.7	40.9	48.8	42.1	49.2	35.7	39.9	45.2	37.7	42.1	37.5	37.3	44.1	45.2	46.0
경제적 평등	27.5	29.1	29.0	24.2	15.8	20.7	18.3	29.9	15.7	18.4	25.8	28.1	19.3	19.9	15.3	17.7
경제적 불안	28.9	18.4	29.8	21.8	23.8	28.5	23.8	19.8	14.5	20.1	26.2	18.0	23.0	24.2	16.9	14.9
전반적 행복감	49.3	35.5	42.9	42.7	34.2	41.4	34.9	39.5	31.5	34.4	42.9	43.0	33.6	40.6	44.4	35.5
경제적 행복지수	45.4	34.2	41.5	40.6	33.8	40.9	35.0	37.6	33.0	34.4	40.7	39.0	32.9	38.3	41.5	34.5
지역별 순위	1	13	2	6	14	4	10	9	15	12	5	7	16	8	2	11
경제적 행복 예측	140.8	109.6	123.4	124.6	103.4	130.2	127.0	132.2	142.0	118.0	144.2	131.2	101.6	140.6	111.4	124.6



○ (직업별)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경제 행복지수가 하락하였는데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타/무직군의 행복지수 하락세가 이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짐

-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의 경제 행복지수만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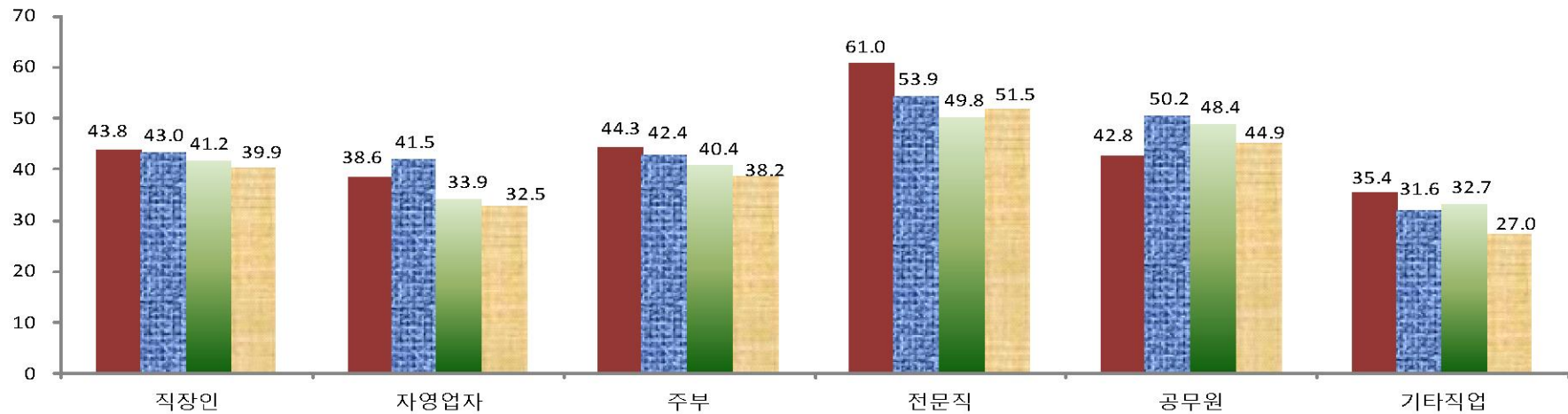
- 2011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전문직으로 전기대비 1.7p 상승한 51.5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조사에서 전문직과 비슷한 경제적 행복감을 보였던 공무원은 전기대비 3.5p 하락한 44.9를 기록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문직이 전기대비 12.0p 상승한 169.2, 공무원도 9.0p 상승한 136.6를 기록하여 이들은 미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수 경기 부진으로 지난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자영업자의 행복지수가 더 낮아졌고 기타/무직군의 경제적 행복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낮아짐

-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군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하락하였음
-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1.4p 하락하면서 32.5를 취약계층인 기타/무직군도 5.7p 떨어져 27.0을 기록함. 한편, 2011년 하반기 이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침체기였던 2008년 상반기의 32.5와 26.3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자영업자가 4.6p, 기타/무직군은 21.6p 하락하여 이들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음

< 직업²⁾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0.6	▽3.9	38.7	▽1.8	44.9	▽6.5	51.9	▽17.7	68.4	▽6.8	29.2	▽3.9
경제적 우위	50.8	0.0	44.9	0.2	51.3	▽3.2	59.6	6.0	51.4	▽9.8	39.2	▽4.5
경제적 발전	46.6	▽6.1	38.0	1.6	37.9	▽5.9	48.1	▽0.1	60.5	0.5	17.7	▽11.2
경제적 평등	22.1	▽1.9	19.5	▽4.8	22.2	▽2.3	19.2	▽7.6	21.5	2.5	30.1	▽1.2
경제적 불안	22.7	▽2.6	23.7	2.1	16.1	▽1.2	28.8	▽3.3	25.6	▽5.1	23.0	1.1
전반적 행복감	41.7	0.8	32.0	▽2.7	42.0	▽0.6	61.5	7.9	44.7	▽2.9	26.4	▽7.3
경제적 행복지수	39.9	▽1.3	32.5	▽1.4	38.2	▽2.2	51.5	1.7	44.9	▽3.5	27.0	▽5.7
경제적 행복 예측	132.4	▽7.4	123.6	▽4.6	120.0	▽3.4	169.2	12.0	136.6	9.0	89.6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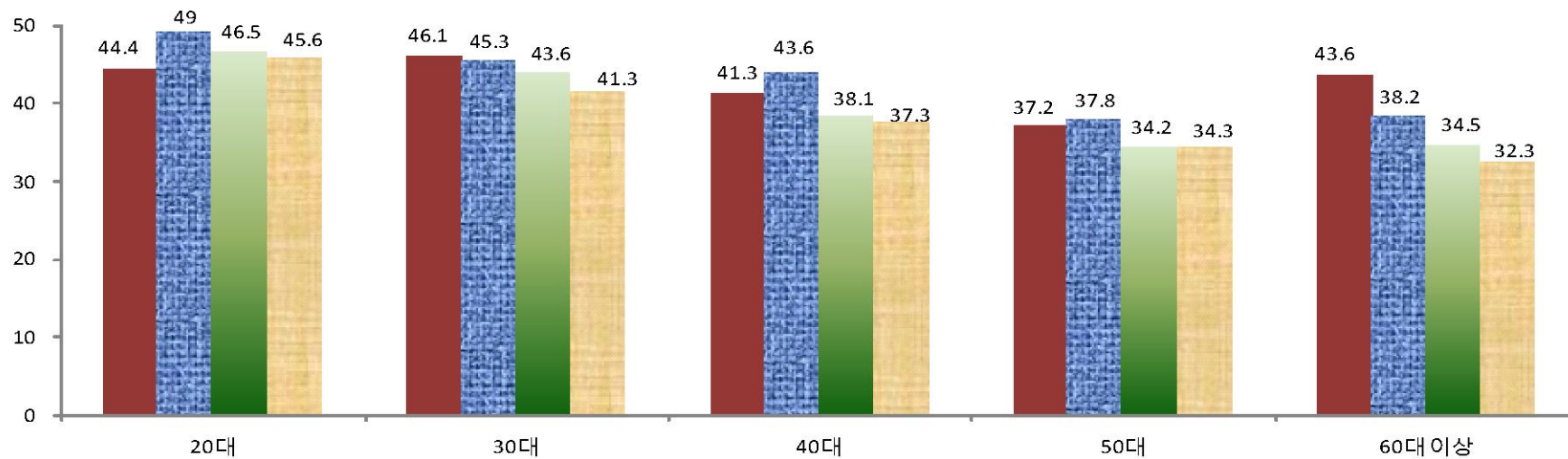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9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지 못함

- 연령대를 기준으로 2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 고령층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음
 - 5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음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로 전기대비 0.9p 하락하였지만 45.6으로 중장년층 대비 높았음. 30대의 경제 행복지수는 전년대비 2.3p 하락한 41.3으로 5회 조사 이후 소폭이지만 4회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가계부채 문제, 실질소득 감소,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지 못했는데, 40대와 60대가 전기대비 각각 0.7p, 2.2p 하락한 37.4와 32.3을 기록. 반면, 지난 조사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50대는 0.1p 상승한 34.3을 나타냈지만 경제적 행복감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20~50대에 걸쳐 모두 소폭 하락하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 반면 지난 조사에서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내년 경제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견지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행복 예측 지수도 낮아져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대의 경우 전기대비 2.2p 하락하였으나 159.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30대가 전기대비 4.4p 하락한 145.6으로 여타 연령층 대비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였음. 반면 60대 이상은 전기대비 11.2p 상승한 96으로 내년 상황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보였으나 여전히 100 보다 낮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는 유지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2.5	4.2	49.4	▽9.8	50.7	▽2.7	46.3	0.3	35.2	▽3.7
경제적 우위	54.9	0.6	48.8	▽5.5	48.5	▽0.9	49.0	3.6	45.5	▽4.7
경제적 발전	53.6	▽4.5	56.4	▽0.8	43.5	▽2.0	31.6	▽3.5	23.5	▽1.1
경제적 평등	28.4	▽1.6	18.1	▽1.9	20.9	▽1.3	22.1	▽3.7	28.8	▽2.7
경제적 불안	29.7	▽4.8	26.0	1.3	19.5	▽1.3	18.1	▽0.5	21.0	0.0
전반적 행복감	48.5	0.6	43.1	▽1.2	38.2	0.3	35.4	1.1	33.8	▽1.9
경제적 행복지수	45.6	▽0.9	41.3	▽2.3	37.4	▽0.7	34.3	0.1	32.3	▽2.2
경제적 행복 예측	159.2	▽2.2	145.6	▽4.4	125.0	▽5.2	106.2	▽2.4	96.0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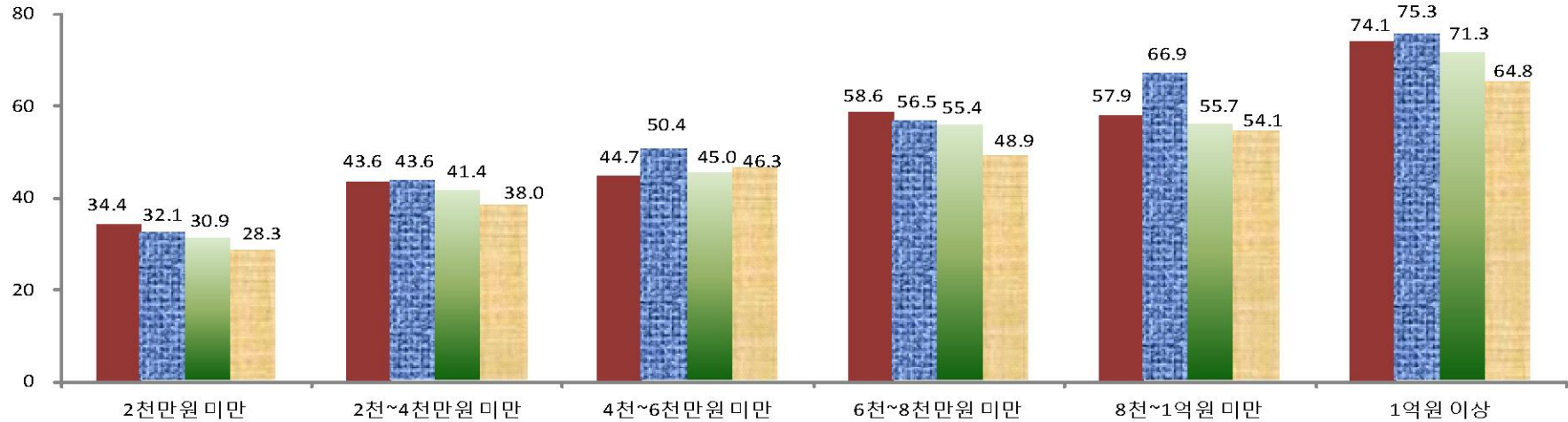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별)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은 높으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행복 지수도 크게 하락했음

- 소득별로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낮아졌으나, 고소득자들은 미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고 저소득자일수록 낮음. 전기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아진 소득계층은 연간 6~8천만원 미만과 1억원 이상 소득자로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행복감도 크게 떨어지고 있음
- 또한, 2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제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2.6p 하락한 28.3을 기록하여 재차 30 이하로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2천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13.6p 하락한 106.4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자세를 보인 반면, 6천만 원 이상의 중·고소득자들은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1.0	▽1.3	48.5	▽7.4	62.2	▽4.9	65.1	▽11.7	72.5	▽9.9	86.4	1.0
경제적 우위	36.0	▽3.1	48.0	▽3.7	60.9	0.5	70.7	▽7.0	72.5	0.4	75.0	▽8.3
경제적 발전	26.8	▽6.5	47.1	▽2.8	53.1	1.2	51.8	▽18.2	50.0	▽13.2	63.6	▽9.3
경제적 평등	23.6	▽3.4	20.5	▽3.0	22.6	0.1	23.2	1.4	27.5	▽4.9	22.7	6.0
경제적 불안	19.0	▽1.1	22.3	▽1.3	24.2	▽0.4	27.2	▽3.3	31.3	3.4	36.4	▽21.9
전반적 행복감	29.6	▽1.8	39.0	▽3.0	48.2	3.5	50.7	▽4.8	57.5	1.6	72.7	▽6.5
경제적 행복지수	28.3	▽2.6	38.0	▽3.4	46.3	1.3	48.9	▽6.5	54.1	▽1.6	64.8	▽6.5
경제적 행복 예측	106.4	▽13.6	131.2	▽2.8	136.4	▽2.0	142.0	7.4	150.0	8.8	16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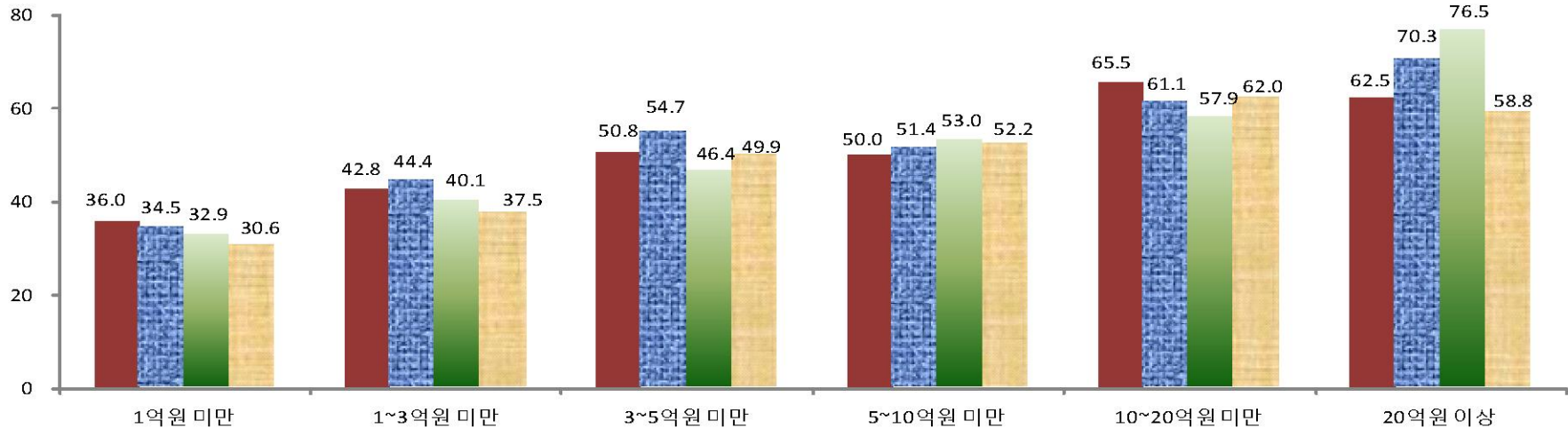


- 자산별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액 자산가의 행복지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저액과 초고액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경제적 행복감은 자산이 많을수록 높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1억원 미만과, 1~3억원 미만이 각각 전기대비 2.3p, 2.6p 하락하였고, 20억원 이상도 17.7p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1~3억 원 미만의 자산가만 전기대비 6p 상승하였을 뿐 그 외 자산가 계층은 불확실성이 높은 2012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자세를 나타냄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7.6	▽3.0	48.3	▽5.3	64.4	3.1	61.1	▽5.3	77.1	▽1.0	87.5	2.5
경제적 우위	36.9	▽5.1	53.6	1.2	63.1	3.7	69.9	4.5	72.9	1.0	100.0	10.0
경제적 발전	36.8	▽0.9	43.4	▽5.5	52.8	▽1.3	51.4	▽1.1	51.0	▽5.3	62.5	▽17.5
경제적 평등	20.3	▽3.2	20.0	▽4.5	25.8	▽0.5	30.7	4.1	33.3	▽7.3	37.5	32.5
경제적 불안	19.5	▽1.8	21.4	0.3	25.9	▽3.8	28.4	▽2.7	31.3	1.1	50.0	▽5.0
전반적 행복감	31.7	▽1.2	37.7	▽2.3	53.4	6.8	56.1	▽2.1	70.8	10.4	50.0	▽40.0
경제적 행복지수	30.6	▽2.3	37.5	▽2.6	49.9	3.5	52.2	▽0.8	62.0	4.1	58.8	▽17.7
경제적 행복 예측	115.4	▽10.8	130.2	6.0	131.6	▽13.0	146.0	▽0.6	150.0	▽8.4	100.0	▽60.0



*. 금번 조사에서 20억원 이상 자산가의 응답자가 2건에 불과하여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는 높지만 전기대비 하락폭도 컸음

- 경제적 행복감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기대비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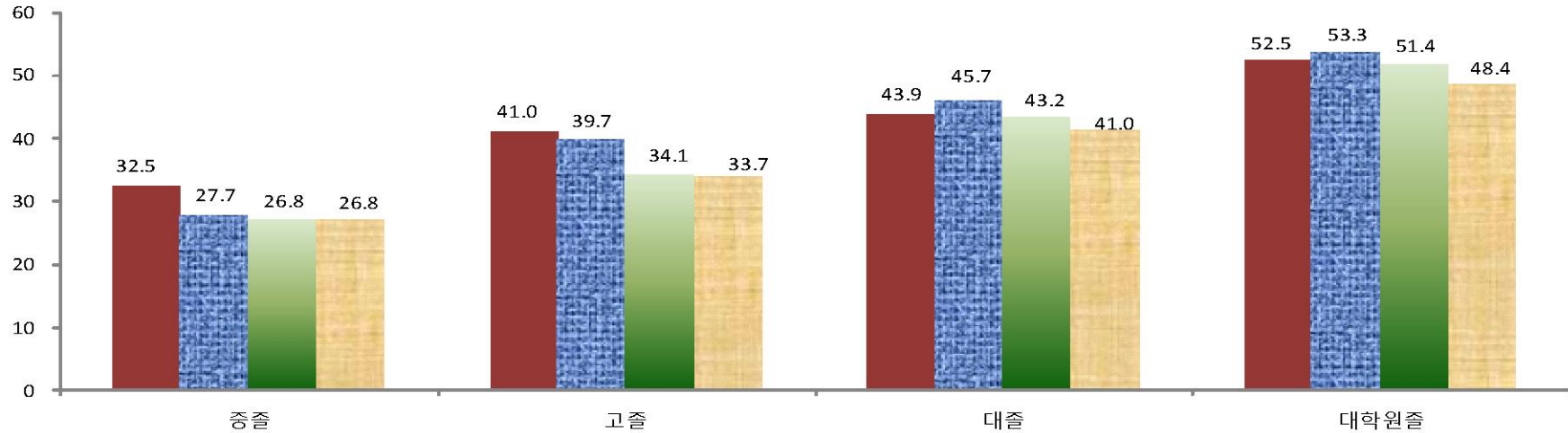
-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2.2p, 3.0p 하락하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지만 고학력자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작았음

- 고학력자들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14p 하락하면서 크게 악화되었음.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자들은 5.2p 상승한 87.8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100 이하로 고학력자들에 비해 비관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29.6	2.0	38.8	▽4.0	53.7	▽3.6	64.1	▽4.5
경제적 우위	39.1	▽0.8	44.3	▽1.8	52.0	▽1.7	61.8	▽0.4
경제적 발전	22.9	▽1.9	33.8	▽2.5	48.9	▽3.8	57.3	▽0.1
경제적 평등	23.6	▽6.7	24.7	▽0.4	20.1	▽3.7	28.2	7.5
경제적 불안	16.1	▽2.2	18.6	▽0.6	24.6	▽1.2	27.3	▽0.9
전반적 행복감	27.5	2.0	35.5	1.3	42.5	▽1.4	49.1	▽6.2
경제적 행복지수	26.8	0.0	33.7	▽0.4	41.0	▽2.2	48.4	▽3.0
경제적 행복 예측	87.8	5.2	114.8	▽4.8	137.0	▽4.0	138.2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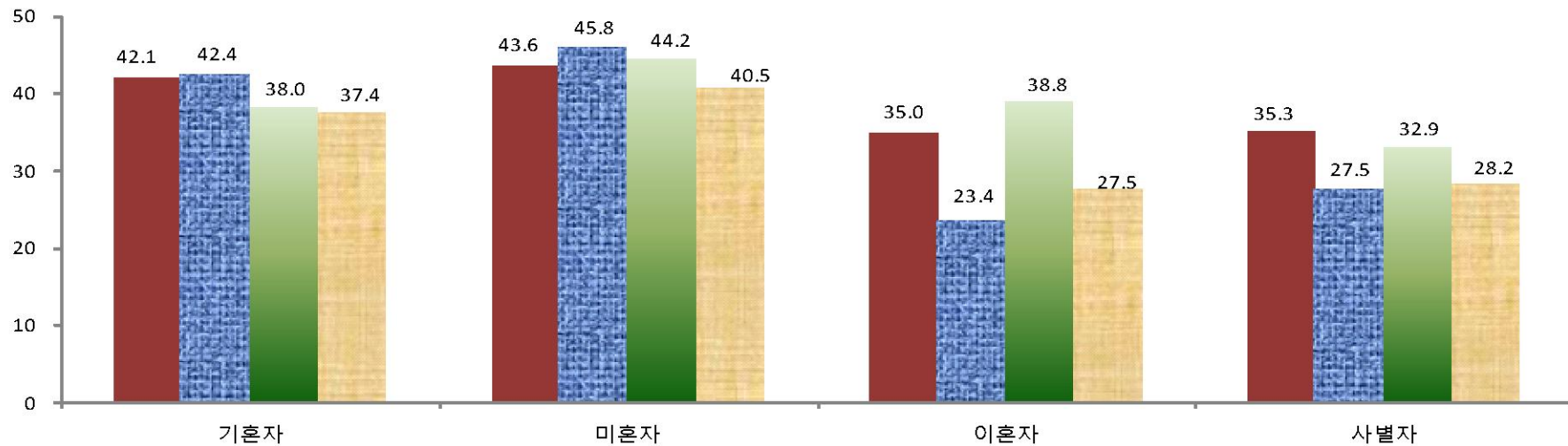
○ (혼인 상태별) 배우자가 없는 싱글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더 크게 하락함

- 미혼자·이혼자·사별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기혼자보다 큰 폭으로 떨어짐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0.5로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 3.7p 하락하였고 이혼자와 사별자도 각각 전년대비 11.3p, 4.7p 하락한 27.5와 28.2를 기록하였음. 반면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37.4로 전기대비 0.6p 하락에 그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미혼자가 136.2로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로는 7.6p 떨어졌고 기혼자도 124.0로 3.4p 하락하여 이들 모두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냄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47.8	▽2.9	48.4	▽3.8	18.8	▽31.2	33.7	▽10.1
경제적 우위	49.8	0.3	47.5	▽6.7	31.3	▽6.2	38.6	▽10.2
경제적 발전	40.6	▽1.6	51.4	▽5.5	31.3	▽68.7	19.6	▽9.2
경제적 평등	21.9	▽1.8	23.6	▽2.9	37.5	▽13.0	19.6	▽14.2
경제적 불안	20.8	0.2	26.9	▽4.4	31.3	6.3	20.7	▽3.1
전반적 행복감	38.8	0.0	42.1	▽2.2	25.0	0.0	30.4	0.4
경제적 행복지수	37.4	▽0.6	40.5	▽3.7	27.5	▽11.3	28.2	▽4.7
경제적 행복 예측	124.0	▽3.4	136.2	▽7.6	150.0	▽5.0	78.2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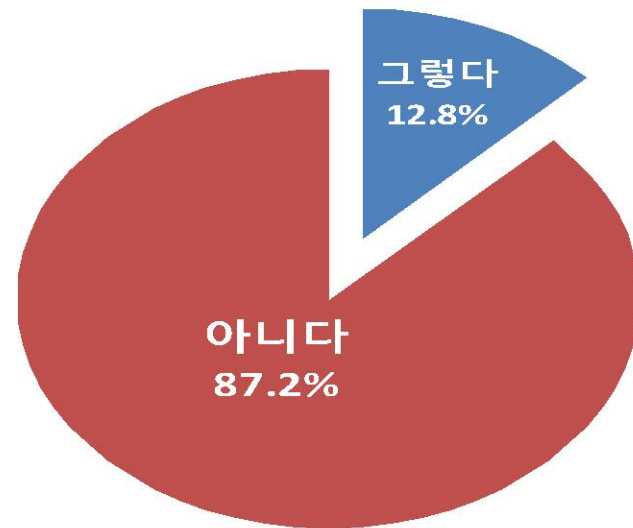
3. 기획 조사 결과

○ 대외 불안요인 증대, 내수 부진 및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생활 속에서 체감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06명의 응답자 중에서 877명(87.2%)이 2011년 하반기 경제지표의 지속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129명(12.8%)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하반기 무역1조 달러 달성, 일자리 증가 등 일부 국내 경제지표의 꾸준한 호조세가 이어졌으나, 대외불안 요인 증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경기회복 체감 여부>



○ 소득감소, 가계 빚 증가 등이 체감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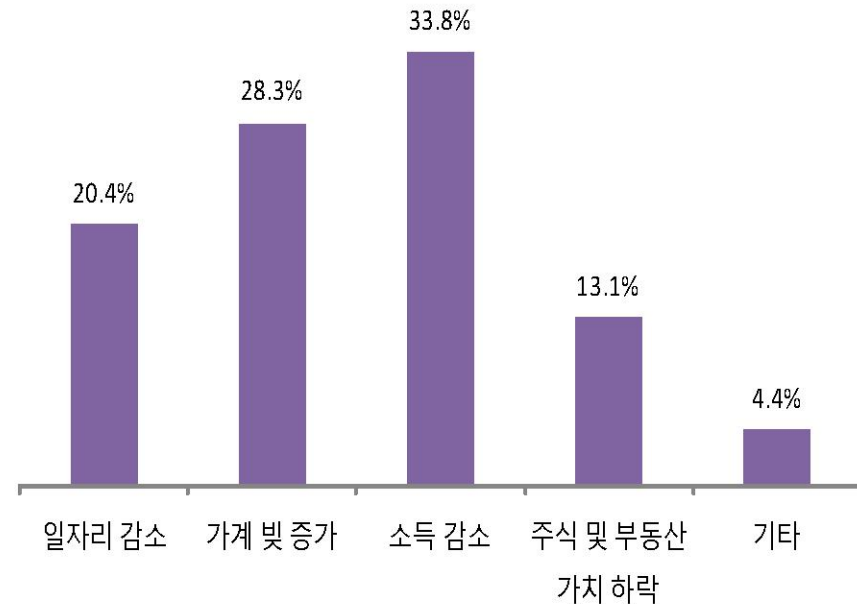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868명 중에서 293명(33.8%)이 소득 감소로 인해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함

· 소득 감소 이외에 '가계빚 증가(28.3%)', '일자리 감소(20.3%)'도 경기 회복감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며, 주식 및 부동산 가치 하락도 13.2%인 114명이 경기 회복 저해 원인으로 지적함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식료품비, 공공요금 등 높은 물가 상승세는 이어진 반면 임금 상승률은 낮아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이외에도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용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인 것으로 조사됨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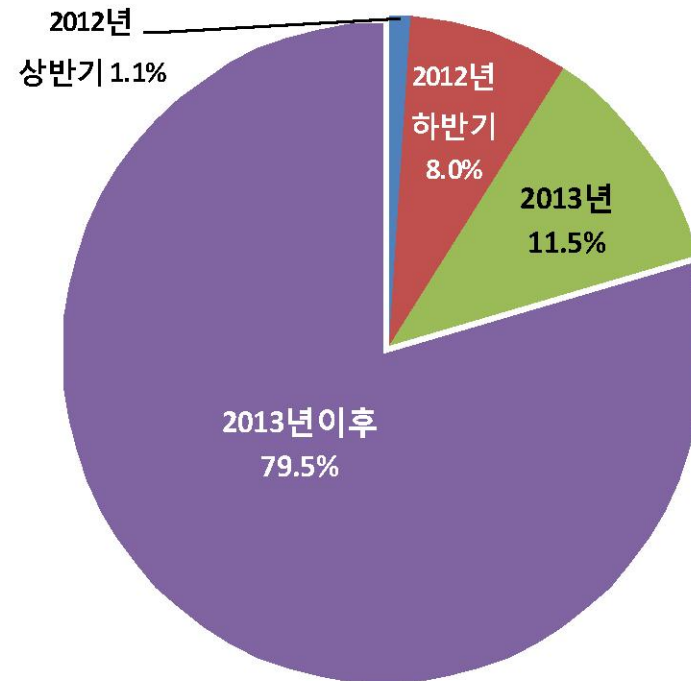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의 79.5%는 2013년 이후에나 체감 경기의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언제쯤 체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854명 중 79.6%인 679명이 2013년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2013년', '2012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는 각각 11.4%, 7.9% 및 1.0%로 나타남
- 2011년 하반기 내내 지속된 내수 부진, 높은 물가 상승세 등으로 우리국민 대다수의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12년에도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선진국 경기 회복 불투명 등으로 본격적인 체감경기 회복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나타냄

<체감 경기 회복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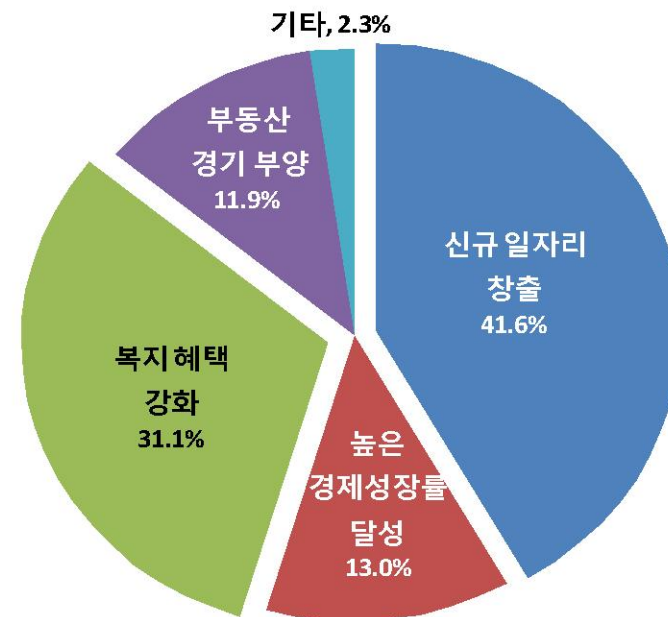


○ 신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 강화가 2012년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임

- 2012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97명의 응답자 중에서 41.4%인 412명이 신규 일자리 창출, 31.1%인 310명은 복지 혜택 강화가 2012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함
- 전체 응답자 중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부동산 경기 부양'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3.1%, 12%로 나타남
- 2012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 제고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나가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복지 혜택 강화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반면, 부동산 경기 부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

<정부의 2012년 우선 추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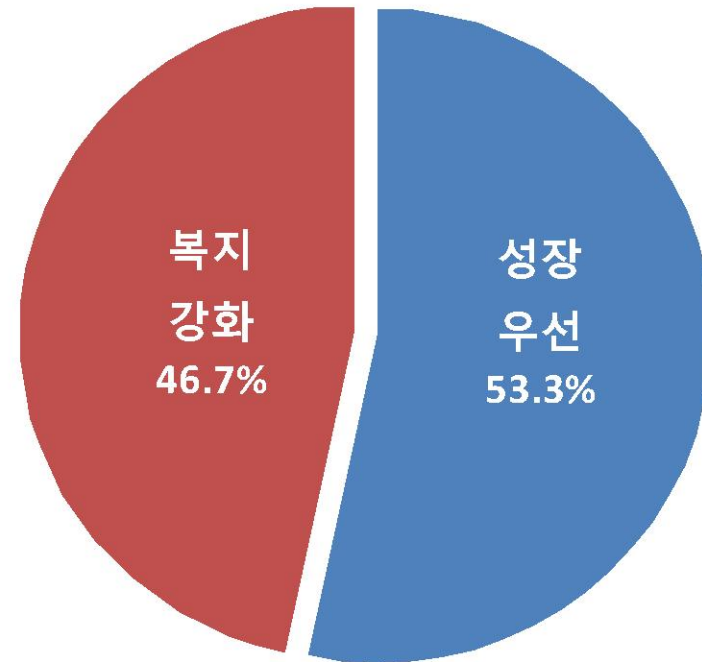


○ 내년 총선, 대선에서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 성장이 복지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자를 지지할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 1006명 중 성장 우선은 53.3%인 536명, 복지 강화는 46.7%인 470명이 선택하여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 성장이 복지보다는 6.6%p 높게 고려사항이라고 조사됨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 등은 성장을 보다 중요시한 반면 직장인은 55.7%가 복지 강화를 선택
- 연령별로도 50대와 60대 이상이 성장을 각각 63.1%, 60.8%로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0~30대는 각각 63.1%, 54.1%가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 소득·자산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1억원 미만의 저액 자산가는 복지 강화가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 보다 복지 강화를 조금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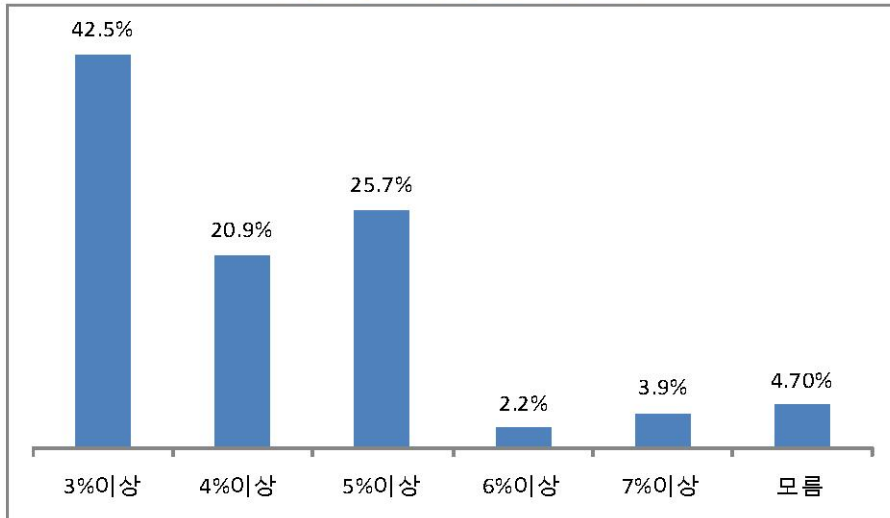
<선거 후보자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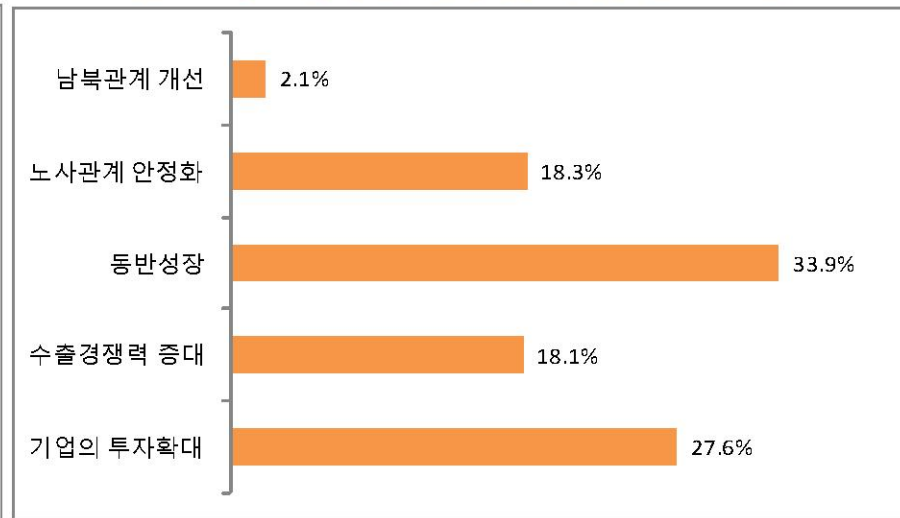
○ 성장을 중시하는 응답자들은 내년 3~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이를 위해 동반성장과 기업 투자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

- 내년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는데, 적정 수준은? -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어떤 분야의 역할이 필요한지?
- 내년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시 성장을 우선한다고 응답한 전체 536명의 응답자 중 228명(42.6%)은 2012년 경제성장률이 3%이상은 달성해야 한다고 답했고, 250명(46.7%)은 4~5% 이상의 달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한편,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하기 위해서는 33.9%가 동반성장을 꼽았고, 기업의 투자확대, 노사관계 안정 및 수출경쟁력 제고는 각각 27.6%, 18.3%, 18.1%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적정 경제성장률 전망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필요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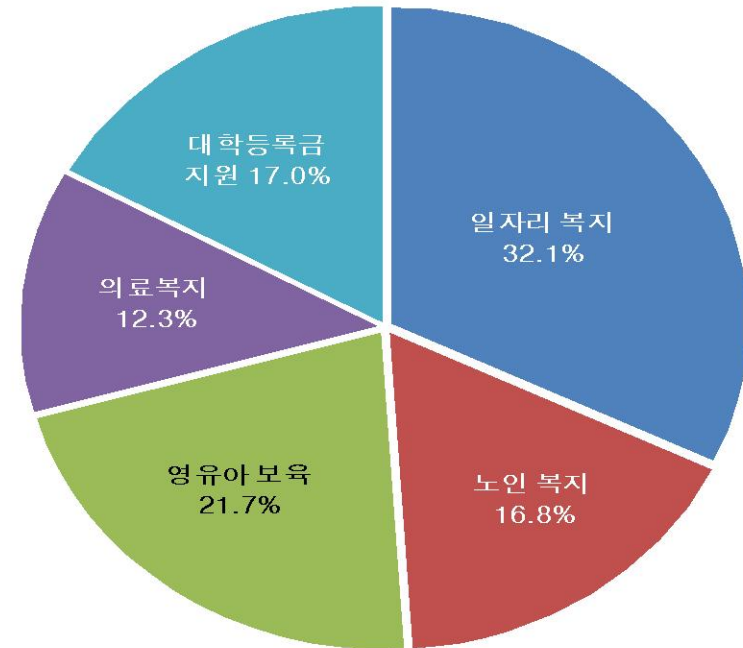


○ 복지 강화라는 응답자들은 일자리 복지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의 복지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 470명 중 일자리 복지는 150명(31.9%)이 선택하여 2012년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정책으로 꼽았음
- 이외에 확대되어야 할 복지 분야로는 영유아 보육 21.6%, 대학등록금 지원 17.3%, 노인복지 16.7%, 의료복지 12.5% 순이었음
- 특히, 일자리 복지는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연령별로는 50대, 소득·자산별로는 고소득·고액자산가들이 중요하다고 선택
- 반면, 영유아보육은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직장인, 연령별로는 30대, 소득·자산별로는 중저위 소득 자산가, 학력별로는 고학력자들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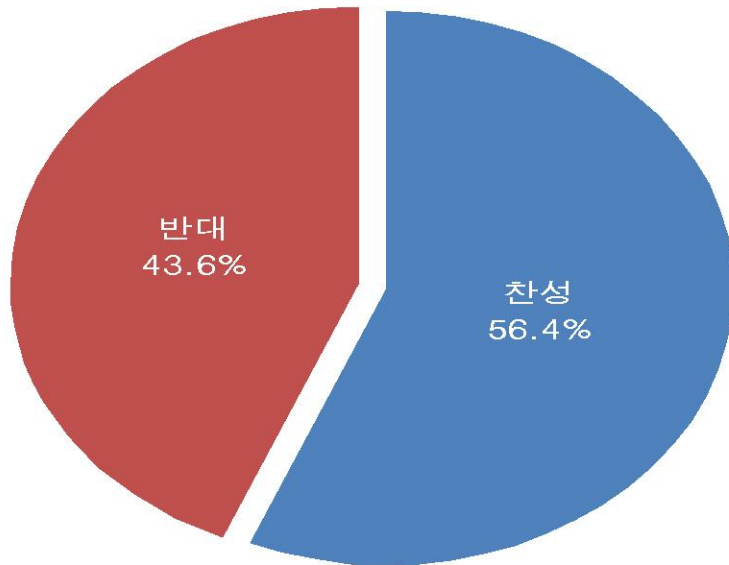
<복지 확대가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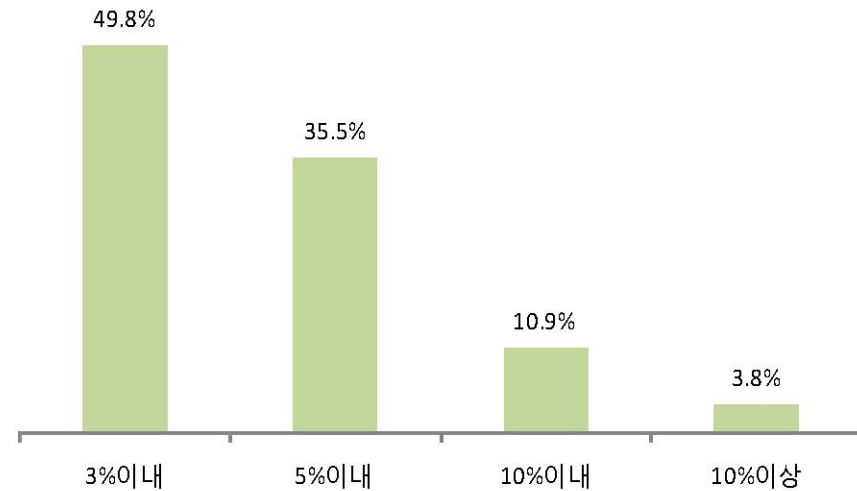
○ 복지강화라는 응답자들 중 56.4%는 대체적으로 현 소득의 5%이내의 추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찬성

- 복지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한다면, 현재 소득에서 어느정도 추가 부담 용의가 있는지요?
- 복지 강화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는 응답자 중 56.4%는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찬성했지만 43.6%는 복지강화에도 추가 세금 부담에는 반대
-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경우, 50%가 현재 소득의 3% 이내를 35.5%는 5% 이내의 세금 추가 부담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세금 추가부담에 관한 찬성 여부>



<추가 세금부담의 용의 정도>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1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전문직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
- 서울의 경제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모두 높았지만 여타 15개 시도는 경제 행복 지수가 6개월 전에 비해 하락하거나 미래 예측 지수가 낮아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저학력의 60대 이상의 남자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무직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하락하였고 전반적인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낮아져 이들은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경제적 행복지수가 대외 불안정성과 내수 경기 부진 지속 및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7.8로 지난 8회 조사(2011년 6월)보다 1.6p 하락하였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4.2p 하락한 125.6를 기록하면서 2012년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가 37.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2011년 상반기 지난 8회 조사에는 3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했던 경제 행복지수는 2011년 하반기 제 9회 조사

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상반기의 38.6보다 낮아짐

- 고용지표 개선,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내내 지속된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대외 불확실성의 가중과 내수 부진 지속, 공공요금 인상 등 체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하락시킨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8회(2011년 상반기) 17.8p 하락에 이어 2011년 하반기 9회 조사에서도 전기대비 4.2p 하락 하면서 2012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일자리 창출, 내수 경기 악화 방지, 가계부채 및 체감 물가 관리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고용, 수출 등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소득 감소, 가계 빚 증가 및 일자리 감소 등이 가계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됨

- 우리 국민의 87.2%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체감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으로서는 응답자의 33.8%가 소득 감소, 28.3%는 가계 빚 증가를 꼽아 높은 물가상승세에도 임금 상승은 제자리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 체감 경기를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고용지표 호조에도 20.4%는 일자리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

- 특히, 우리 국민들의 79.5%는 가계의 체감 경기가 2013년 이후에나 개선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이 대다수임. 이에 따라 우리국민들은 2012년 정부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 강화가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 성장(53.3%)을 복지 강화(46.7%)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고려

- 세대·계층·학력 간에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은 성장을 보다 중시한 반면 직장인의 55.6% 복지를 중시
-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3.2%, 60.8%가 성장을 중요시 했지만, 20~30대는 63.1%, 54.1%가 복지를 우선
- 소득자산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1억원 미만의 저액자산가에서 복지 강화를 더 중요 고려사항으로 인식
-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수준에서 성장을 복지강화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대졸 49.3%, 대학원졸 45.5%)이 저학력자(중졸 40.4%, 고졸 44.3%) 보다 복지 강화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

-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내년 3~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이를 위한 동반성장과 기업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 이들의 89.1%는 2012년 3~5%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33.9%), 기업의 투자확대(27.6%), 노사관계 안정(18.3%)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복지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일자리 복지, 영유아 보육 복지, 대학등록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편, 이들 중 복지 강화를 따른 추가 세금 부담에는 56.4%가 찬성하며 현재 소득에서 5% 이내의 추가 부담에 85.3%가 찬성

○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최근 2%로 낮아진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일자리 창출 및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청년, 중장년, 고

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직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함

- 둘째, 국민 대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체감 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특히,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필요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요구
- 또한, 2012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

- 넷째, 복지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 20~30대일수록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젊은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대학등록금, 주택 및 보육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함
- 더욱이, 복지 재원 부담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만큼, 복지지출과 부담의 연계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홍 유 림	전 문 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